

민주, ‘3번 이상 탈당 전력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검토

법범자 등 부적격 기준 강화…컷오프 최소화 방침
경선서 당원 투표 비율 상향 전망…승부처는 예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말까지 내년 6·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 등 공천 통틀을 완료할 예정이다.

10일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공천 제도·전략 2개 분과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정청래 대표의 방침에 따라 일단 컷오프(배제)를 최소화하

고, 되도록 많은 후보들에게 경선의 기회를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역을 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신에 사전 검증 과정에서 범죄 경력자 등 경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역대 선거보다 정밀한

후보 심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자격을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으로 나누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과정에서 배제(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가 된다.

또,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예외가 있는)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당원 주권 정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55% 반영했으며 사실상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역·기초의원(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충청 등과 같이 지방선거 승부처인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의 경우 중도층 표심까지 끌어모아야 하기에 선거인단에 일반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을

전력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회하는 우려곡절 끝에 후보 경선을 일반 국민 여론 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직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중순께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를 100일 앞둔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경선을 치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진욱 “중기부 산하 공고 교사 10명 중 7명 기간제”

평균 근속 2.2년 불과…“안정적 충원과 처우 개선 제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기전자·기계 등 전문교과 분야의 교사 편성이 기간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소벤처기업

부 산하 3개 국립공고에서 지난 2022년 이후 새로 들어온 (임용, 전임 통합) 전체 교사 65%. 특히 산업 현장 기술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교과의 경우 74.6%가 기간제로 채워졌다.

올해 기준 학교별로 살펴보면 구미전자공고는 신규 부임 교사 47명 중 32명이 기간제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은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기간제 교사 평균 근속연수는 구미전자공고 2.0년, 부산기계공고 2.4년, 전북기계공고 2.1년으로, 전체 평균 약 2.2년에 불과했다.

정진욱 의원은 “중기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전문교과 교사 충원을 안정적으로 추진, 기간제 교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책과 떠나는 가을 여행’ 1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5 빛고를 책 한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야외광장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남도의 손맛 ‘미식로드’, 세계 입맛 사로잡다

남도국제미식박람회 핵심 콘텐츠 부상
24개 팀, 18개 부스에서 제철 식재료 향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개막 이후 연일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며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가 남도의 맛과 멋을 한데 모은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미식로드’는 서류심사와 실기 시연을 통해 선발된 24개 팀이 18개 부스에서 남도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메뉴를 직접 조리·판매하며,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남도 미식의 정수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홍어, 낙지, 쪄뽕어, 꼬막, 바지락, 대파, 무화과 등 남도 특산물을 재료로 한 대

표 메뉴와 사이드 메뉴가 줄지어 등장해 남도의 손맛과 향토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 바로 조리되는 음식은 맛과 향이 살아 있어 관람객들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다.

가격 또한 1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어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람객은 미식로드 부스에서 구매할 음식을 취식존으로 옮겨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어 ‘남도 미식 피크닉’ 분위기를 자아낸다. 박람회 측은 성인 유료 입장객 1000명을 대상으로 2000원 상당의 음식 할인권을 매일 선착순 제공하며 호응을

더하고 있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미식로드는 단순한 음식 판매장이 아니라 남도의 손맛과 제철 식재료, 미식문화가 어우러진 생생한 현장”이라며 “관람객들이 남도 음식의 깊은 매력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NICE 2025)’는 ‘자연이 차린 식탁, 남도: 지속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달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 정부 승인 국제 미식 테마 박람회로, 전통의 가치와 산업의 혁신을 아우르는 전시·체험·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준호 “‘땅속 구멍’ 광주 116곳 방치”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발 시한폭탄 예방해야”

광주지역 싱크홀(땅꺼짐)의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땅 속 구멍) 116곳이 방치되고 있어 재난 예방책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사진)이 1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지방침하 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km에 달하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이 중 보수가 완료된 곳은 479개에 불과해, 나머지 45% (393개)에 달하는 공동이 아직 방치된 상황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141개로 뒤를 이었다. 광역시 가운데선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어 경남에서 136개, 대구에서 77개

의 공동이 발견됐다.

광주의 경우, 지금까지 발견된 141개 공동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25건 (16%)에 불과했다. 116개의 공동이 시한폭탄처럼 시민의 발발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공동의 등급은 긴급·우선·일반의 세 등급으로 분류된다.

방치된 공동 중 74% (291건)가 관리가 시급한 긴급·우선 등급이다.

긴급 등급은 4.0㎡ 이상의 큰 면적으로 발견 즉시 매워야 하고, 우선 등급은 1.0㎡ 이상에서 4.0㎡ 미만 면적으로 발견 3개월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 일반 등급은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



한 모든 공동으로, 이 역시도 6개월 이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과 지하공사’다.

공동은 노후하수관로, 상습 침수지역,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 인근 등에서 발견된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다.

정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 낸 재난이자,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공동 발견 후 조치결과를 안전관리원이 통보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발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1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양형기준 강화

“보험사기, 어차피 다들 하는 거 아니냐?”
가벼운 판단이, 무거운 처벌로 되돌아옵니다.
의료인·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경철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